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 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(4.23.)

- 최근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 
원유, 나프타 등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 
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물가상승 압력이 민생분야로 확대될 우려도 큰 만큼  
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.
- 공정위는 어제 4월 2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,  
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3,383억 원,  
법인 고발과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.
- 한솔제지·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은  
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 
교육, 출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 
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해왔습니다.
-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, 낮은 수익성, 공급과잉 등  
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 
기술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,  
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 
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 
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입니다.
- 이런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 
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 
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 
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 
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입니다.

-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
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
- 우선, 반복 담합에 대한  
▲과징금 가중 확대, ▲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, 지분매각,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·제도 개선도 소관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.
  - 예컨대,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입찰담합 외 가격담합에도 적용되도록 확대하고, 자격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.
  - 건설·부동산 분야에 적용되는 담합 반복 가담자에 대한 등록·허가 취소 제도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  - 관계 부처의 적극적 협조도 당부드립니다.
- 공정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외적 공급망 불안정성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 
국토부 1차관 모두발언(4.23)

-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원료를 기반으로 한  
건설자재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,  
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<sup>4.3</sup>를 중심으로  
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 
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 중입니다.
  
- 지난 4월 10일부터는  
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청의 인력을 총동원하여  
최종재 수급뿐 아니라  
중간재, 원료 생산 및 유통과정 등  
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 
현장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있습니다.
  
- 건설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 
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,  
도로·철도 등 SOC 건설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,  
국토교통부는 사후 대응이 아닌  
사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□ ①자재 생산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

일련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서,  
건설자재 생산이 시급한 현장을 중심으로,  
공급 불안요소를 해소하고,  
건설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②매주 현장점검 결과를 기반으로

공급망 정보를 공유하면서,  
담합·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 
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○ ③그리고,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료가격 하향 안정화  
및 공급망 다변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

국민과 건설현장 종사자분들께서  
정부가 건설자재 수급 상황을  
차질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 
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며  
건설산업 피해를 줄이는데  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